

文정부 마지막 국방·외교·통일 업무보고까지... 모두 '남북대화 재개' 목표

국방부 "9.19합의 준수" 통일부 "남북대화 재개" 외교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해수부 공무원 살해... 대화 거부하는 북한 현실은 외면

기사입력 2021-12-23 16:37:32 | 최종수정 2021-12-23 16:42:17 | 전경웅 기자 | enoch2051@hanmail.net



▲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가 23일 서울 상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2022년 합동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가졌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외교부·통일부가 문재인정부 마지막 합동업무보고를 마쳤다. 안보부처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내년도 주요 업무목표로 남북대화, 협력 재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꼽았다.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언급했지만 "9.19군사합의 실천을 통한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돋보이게 하는 수식어로 사용했다.

안보부처들, 문재인정부 성과로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 두 번의 미북정상회담 꼽아

국방부·외교부·통일부는 23일 공개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라는 기치 아래 (문재인정부가) 끝까지 챙겨야 할 5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서면보고했다"고

밝혔다.

세 부처는 문재인정부에서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 두 번의 미북정상회담,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 회동 실현”을 중대한 성과라고 주장했다.

안보부처들이 지적한 이벤트는 실질적 결과를 낳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를 바탕으로 남북-미북관계 선순환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실현 여건을 마련했다”는 것이 안보부처들의 주장이었다.

이들 부처는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비롯한 (남북·미북) 대화 모멘텀을 마련해 조속한 남북 대화·협력 재개를 준비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부는 전력 강화를 통한 적의 도발 억지 및 제압보다 “남북 간 9·19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하는 것에 업무 중점을 뒀다. 국방부가 밝힌 주요 업무성과는 9·19군사합의 준수’를 바탕으로 한 ‘DMZ 평화의 길’ 개방 및 노선 확대, ‘통일걷기’, 판문점 견학 확대 프로그램 운영이었다.

국방부의 2022년 주요 업무계획 “9·19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

국방부는 2022년 주요 업무가 “9·19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군사적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가운데 육·해·공 접경지역에서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실천해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 북한이 지난해 파기한 9·19군사합의를 계속 지키겠다고 밝혔다.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유해 발굴,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판문점 견학, 철거한 GP와 연계한 DMZ 평화의 길 관광, 한강 하구 시범항행 등의 사업을 ‘9·19남북군사합의’를 실천하는 방안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북한이 접경지역에서 도발할 경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대응한다거나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겠다는 메시지는 보이지 않았다.

국방부가 ‘9·19군사합의’ 다음으로 강조한 업무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었다. 코로나 대유행 등으로 인해 전작권 전환능력 검증 2단계를 끝내지도 못했음에도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해 6월 북한은 개성소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지난해 9월 서해상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이후로 북한은 아예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뉴스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통일부 내년도 업무계획 “남북대화 복원, 분야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통일부는 내년 주요 업무목표로 “조속한 남북대화 복원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몇 가지 계획을 제시했다.

먼저 남북 통신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바탕으로 남북 간 영상회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남북 정상 합의 이행을 위한 의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대화과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차원에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고, 남북관계, 비핵화, 평화체제의 포괄적 진전을 통한 흔들리지 않는 한반도 평화의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밖에 남북경제협력, 사회·문화·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사업 재개, 민간·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도 지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런데 통일부 업무계획에 가장 중요한 ‘현실’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남북 간 실질적 대화는 지난해 6월16일 북한이 개성 소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9월에는 서해상에 표류하던 해수부 공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면서 끊겼다.

북한은 그 후로도 우리 측의 끈질긴 대화 요구를 거부했다. 이런 현실임에도 통일부는 “내년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는 목표를 내놨다.

외교부의 내년 업무계획 “한미동맹 발전시키면서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

외교부는 업무보고에서 “한미동맹을 한반도, 지역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지속 발전시키고, 중국과는 미래지향적 발전 모색을 통해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기조를 정권 말까지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외교부도 다른 두 부처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내년도 목표로 제시했다. “긴밀한 한미공조와 중국·일본·러시아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대북 관여 구상을 통해 북한과 대화 재개에 노력을 집중, 지속가능한 비핵화 과정 돌입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정부의 한·미·일 공조 협력 촉구를 의식한 듯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말도 있었다.

외교부는 이어 “한반도와 유라시아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우크라이나 정세는 그리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었다.

한편 외교부는 최근 요소수대란, 반도체 부족 등으로 불거진 세계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경제안보외교’를 강화하겠다고만 밝혔다.

전경웅 기자 (enoch2051@hanmail.net)

이 기사 주소: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12/23/2021122300183.html>

